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2017. 01. 09 |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 smj@saesay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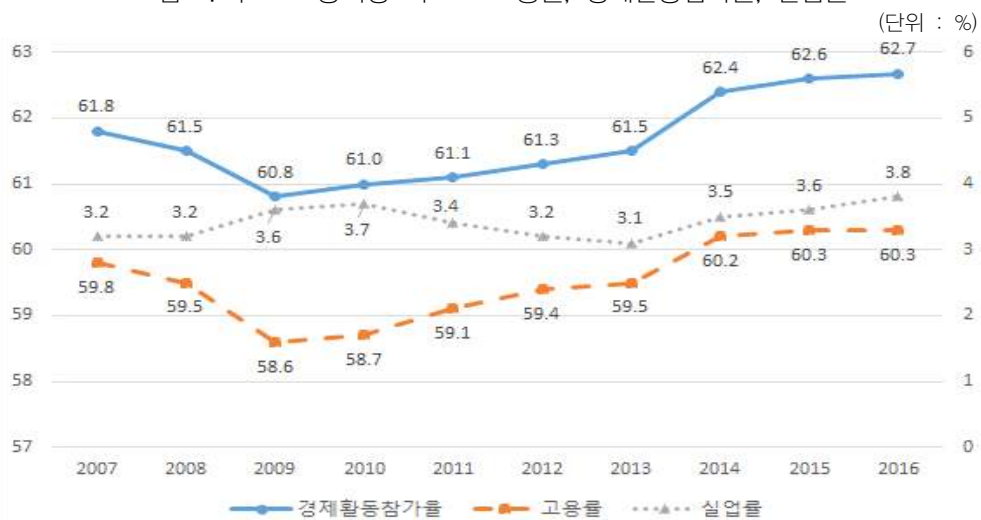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실업률의 연속적인 상승

2016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실업률이 상승하여 조사년도인 2007년에서 2016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지난 3년간 고용지표 개선의 정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구직자가 많아진 것 대비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과 더불어 불안정성이 커진 것이 2016년의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그림 1. 주요 노동시장 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7년-2016년 (단, 2016년은 1월-11월의 평균값임)

참고 : 좌측 축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 우측 축 -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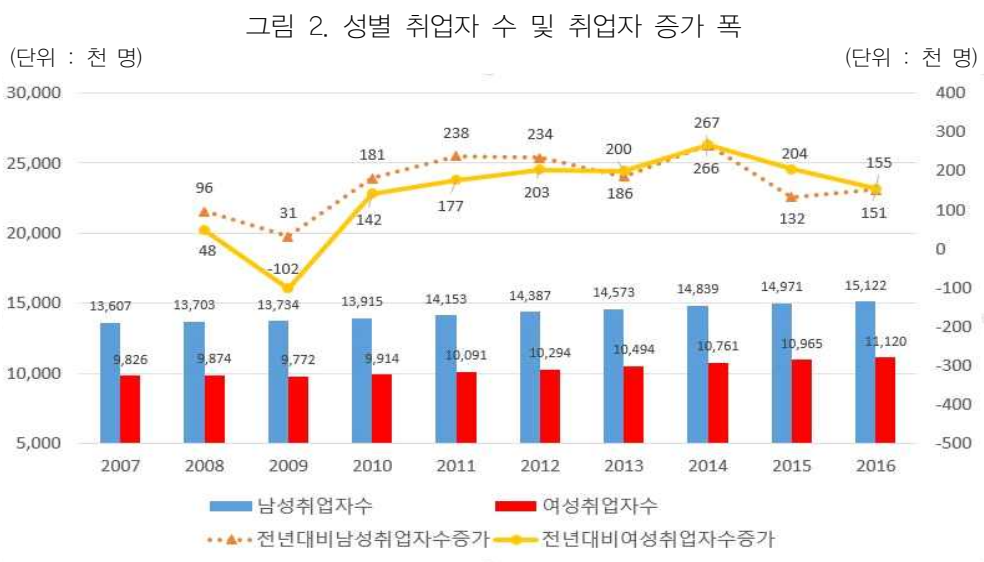


2017 전망 보고서

앞의 <그림 1>을 참고하면, 고용률은 2016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 60.3%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상승했던 실업률이 2016년에도 0.1%p 올라 3년 연속 상승하였다.¹⁾ 일자리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이다. 2014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2013년 동기 대비 늘어난 일자리의 수는 53만 3천 개였고,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2014년 동기와 대비하면 32만 2천 개로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1월부터 11월까지, 동기간의 2016년 지표에서는 3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실업률이 상승한 기간 동안 일자리 수 증가 정도가 확연히 누그러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관측된다.

2) 여성 취업자 수 증가 추세는 주춤, 중고령층 취업은 증가세 계속

<그림 2>는 성별 취업자 수의 변화추이를 2007년부터 증감추이와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6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15만 1천 명이 증가하였다. 1월부터 11월까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3년 대비 2014년은 27만 명 증가, 2014년 대비 2015년은 19만 5천 명이 증가하였다. 즉,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던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 반면 남성 취업자 증가 폭은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약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성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여성 취업자 증가수와 남성 취업자 증가 수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7년-2016년 (단, 2016년은 1월-11월의 평균값임)
 참고 : 좌측 축 - 취업자 수 / 우측 축 - 취업자 수 증가 폭

1) 2015년 1월-11월 기준 고용률 60.3%, 실업률 3.7%, 경제활동참가율 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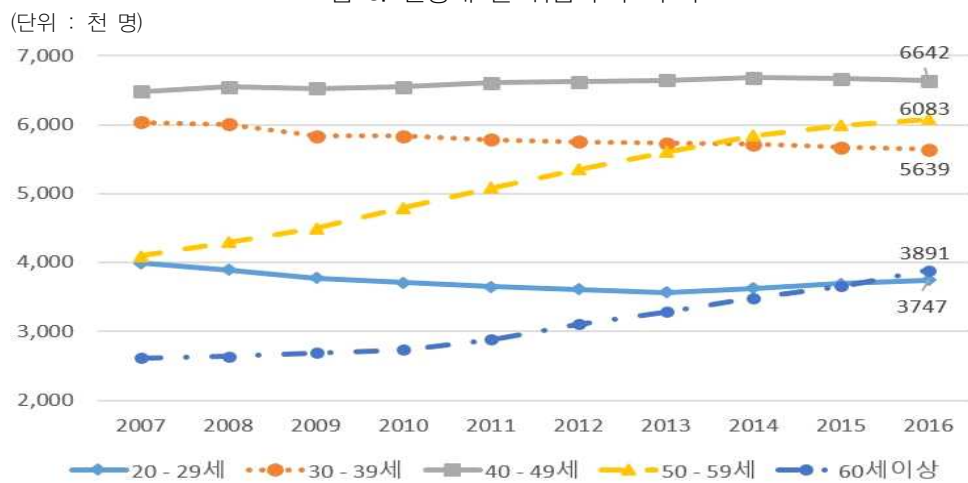


2017 전망 보고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50.2% (남성 고용률 71.1%)를 기록하며,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최저 47.7%, 최고 49.9%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내에서는 올라간 수치이지만, 7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남성 고용률에 비하면 20%p 가량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산업의 일자리 환경이 여성 당사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여성들의 취업시장 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이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가와 지자체간 논란과 이로 인한 육아 불안감 및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 취업자가 많은 소규모 작업장 및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수년 간 관성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성과연봉제와 같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도입 직전인 시장 상황이 여성 취업자 수 증가세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림 3. 연령대 별 취업자 수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7년-2016년 (단, 2016년은 1월-11월의 평균값임)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중고령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가 50대 및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더 많았는데, 올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 보다 약 15만 명 많았다. 2016년 1월부터 11월간 월평균 연령대별 취업자 중 20대 취업자 수가 374만 1천 명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 취업자 수가 563만 9천 명, 40대 취업자 수가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664만 2천 명, 50대 취업자 수가 608만 3천 명, 그리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389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20대는 5만 6천명 증가, 30대는 3만 5천 명 감소, 40대는 2만 7천 명 감소, 50대는 9만 2천명 증가, 60세 이상은 21만 8천명 증가하여 특히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일자리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5년에는 20대 청년들의 취업자 규모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규모가 비슷하였는데, 2016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조사기간 중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0대 청년층과 50대 중고령층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에는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399만 2천명, 50대 중년층 취업자 수가 409만 3천명으로 1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현재는 약 234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60세 이상과 비교했을 때 20대 청년 취업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보다 137만 4천 명이나 많았지만 9년이 지난 2016년 현재 1월에서 11월 기간에는 오히려 14만 4천명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과거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를 제외하고 취업률과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가 원인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일자리의 양적 증가 대비 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먼저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과 연령별 취업자 추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고령층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질적으로 열악한데, 50세 이상 취업자가 비정규직 일자리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 기준 60세 이상의 월평균 임금은 135만 4천 원, 60세 이상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05만 7천 원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36만 8천 원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고령층의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들이 저임금 노동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여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측면에서 보면 여성 월평균 임금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175만 8천원인데 같은 시기의 남성 월평균 임금이 284만 6천 원이다. 남성의 월평균 임금과 여성의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무려 108만 8천 원이었다. 즉, 남성 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불과 61.8%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 123만 1천원으로 더욱 열악한 노동 환경이 드러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 주세요.



2017 전망 보고서

3) 산업별 고용동향 -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산업별 취업자 수는 <표 1>과 같이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아 고용시장에서 제조업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증감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2015년 1월 - 11월)에 가장 많은 취업자 수와 증가수를 보인 제조업은 오히려 2016년에는 약 1천 명가량 취업자 수가 줄었다.

표 1.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산 업	2013	2014	2015	2016	2016 증감
전 산업	25,066	25,599	25,936	26,241	305
농업, 임업 및 어업	1,520	1,452	1,345	1,311	-34
광업	16	13	14	19	5
제조업	4,184	4,330	4,486	4,485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0	83	93	89	-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73	87	88	96	8
건설업	1,754	1,796	1,823	1,837	14
도매 및 소매업	3,660	3,792	3,783	3,726	-57
운수업	1,413	1,407	1,409	1,413	4
숙박 및 음식점업	1,971	2,098	2,179	2,273	9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92	714	772	784	12
금융 및 보험업	864	837	789	796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5	508	535	569	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22	1,025	1,048	1,101	5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73	1,180	1,249	1,292	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66	957	936	995	59
교육 서비스업	1,748	1,807	1,818	1,841	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54	1,693	1,770	1,849	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2	394	424	404	-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12	1,299	1,277	1,274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72	116	82	70	-12
국제 및 외국기관	7	14	18	16	-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13-2016 (단, 2016년은 1월-11월의 평균값임)

전체적인 증가폭도 줄어들었는데,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 대비 34만 3천 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 대비 30만 5천 명 증가하여 3만 8천 명 정도 적게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농업, 도소매업, 금융업, 공공행정, 개인 서비스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 등 6개 산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발생했다면 2016년에는 8개 산업에서 감소가 일어났다. 이처럼 2016년에는 지난 해 대비 취업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시장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둔해진 경향이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첫 번째로 숙박 및 음식점업(9만 4천 명 증가), 이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만 9천 명 증가), 공공행정(5만 9천 명 증가) 및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만 3천 명 증가)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제조업이 단일 산업으로만 15만 명의 취업자 증가폭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압도적으로 고용을 리드한 산업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의 질적 우려도가 높은 일자리들이 많은 산업분야이다. 단적으로 임금 수준을 보았을 때, 2016년 8월 기준 전산업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236만 7천 원인 것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월평균 임금은 132만 7천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86만 3천 원으로 각각 104만 원, 50만 4천 원 낮다.

반면,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5만 7천 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4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 명)이 대표적이다.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은 2013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으로 3년 간 거의 21만 명의 감소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농업처럼 매년 감소하는 산업은 아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전체 일자리 중 제조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2014년까지 40만 명을 밀도는 취업자 수를 보이다가 2015년에 42만 4천 명이 취업하고 2016년 하락하였다.

이상으로 2016년 노동시장 동향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고용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 개선의 정도가 느려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지난 2015년의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였는데, 2016년에는 실업률까지 상승하면서 보다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적은 폭이긴 하지만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용을 리드한 산업이 있지는 않았으나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지속되었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임금 측면을 함께 보면 증가한 일자리의 환경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와 같이 쉬운 해고가 가능한 제도가 도입될 위험에 놓이면서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일자리 정책의 양적 목표에 대한 걱정과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쉽게 질적 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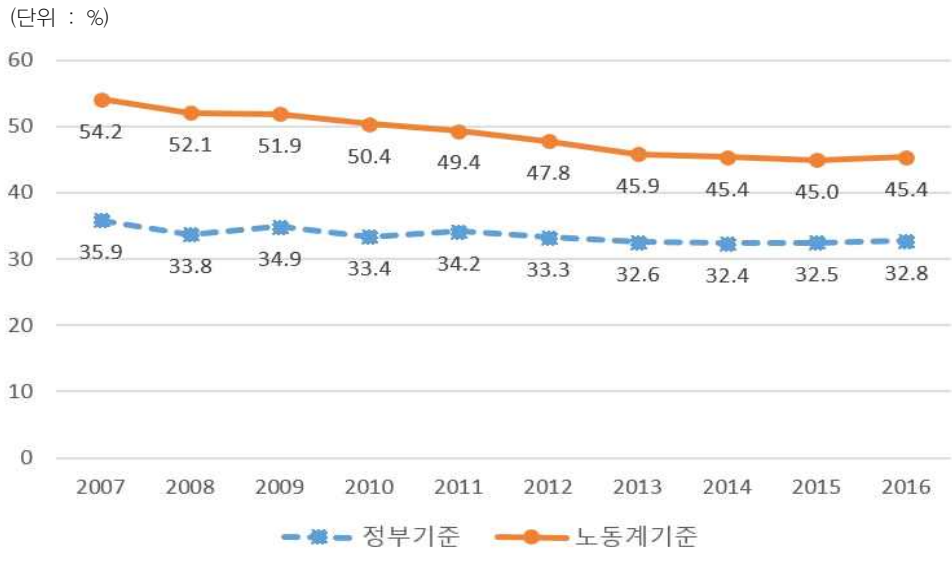
2017 전망 보고서

2016년의 비정규직과 여성노동

1)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시장 내 양적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심각한 실업문제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휩쓴 이후 고용 정책은 양적 개선에만 방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누적되어 왔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안정성은 물론이고 임금 및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들은 입직이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 및 이직이 어렵다는 공포로 취업 준비기간을 증가시키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취업 한 곳은 수많은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비정규직으로 입직을 하더라도 추후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주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반영되는 임금 실태라면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그림 4.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규모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활용 추계
 참고 : 각 연도 8월 기준

<그림 4>는 비정규직 규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정부 통계와 노동계 통계



2017 전망 보고서

는 비정규직 규모를 다르게 추산하고 있는데, 정부 통계의 경우 비정규직의 개념에 한시적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비전형 일자리라는 고용형태만을 포함시킨다. 하지만 노동계의 통계에서는 종사자의 지위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있다. 2016년 8월에 비정규직 비율은 소폭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를 따르면, 2016년 8월 644만 4천 명이 비정규직인데 이는 임금 근로자의 32.8% 규모이다. 2015년 8월 627만 1천 명(32.5%)과 비교해 보았을 때 17만 3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 모습이다. 노동계의 통계를 따를 경우 2016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는 874만 8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45.4%가 비정규직으로 확인된다. 2015년 8월 868만 5천 명(45%)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6만 4천 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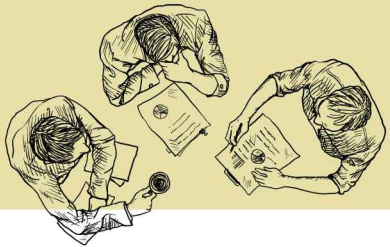
2011년 이후로 지속해서 비율이 낮아지고 있던 비정규직 규모가 2016년에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증가한 일자리의 많은 부분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가 주는 불안함은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전가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 수준이다.

그림 5.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활용 추계
 참고1 : 각 연도 8월 기준
 참고2 : 좌측 축 - 임금, 우측 축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그림 5>의 분석 결과 2016년 8월 기준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305만 9천 원과 150만 6천 원으로 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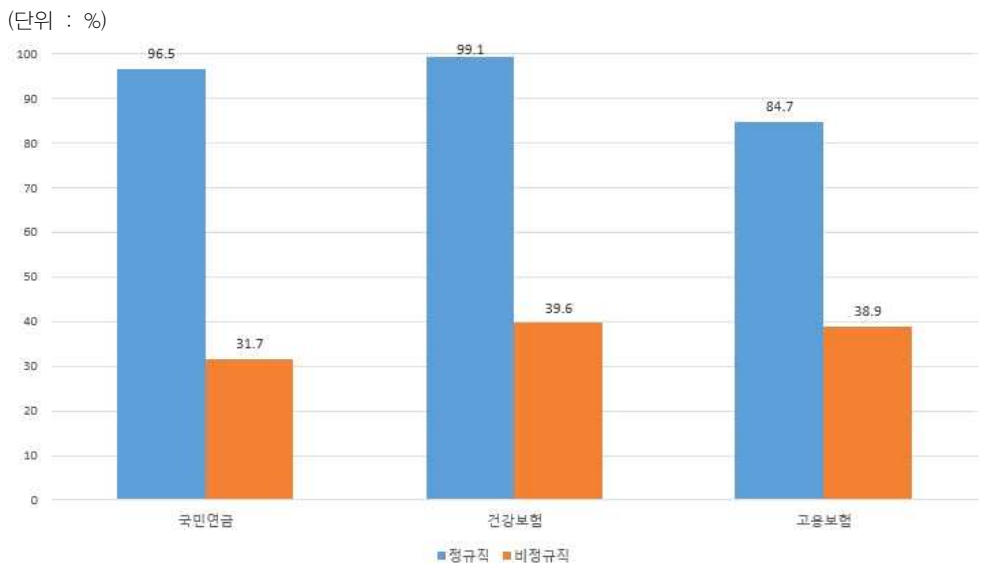


2017 전망 보고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비정규직의 두 배 이상이다. 특히 지난해보다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0.7%p 하락한 것이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커졌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가되는 사회적 위험은 고용불안정과 상대적 저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지원 측면에서도 소외되어 중첩 부가된다. <그림 6>은 2016년 8월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해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은 40%가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직장으로부터 지원되어 보장받고 있다.

그림 6.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 비교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8월 부가조사 활용 추계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인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그리고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체감온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사회 구성원 내 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2) 여성 노동자들의 이중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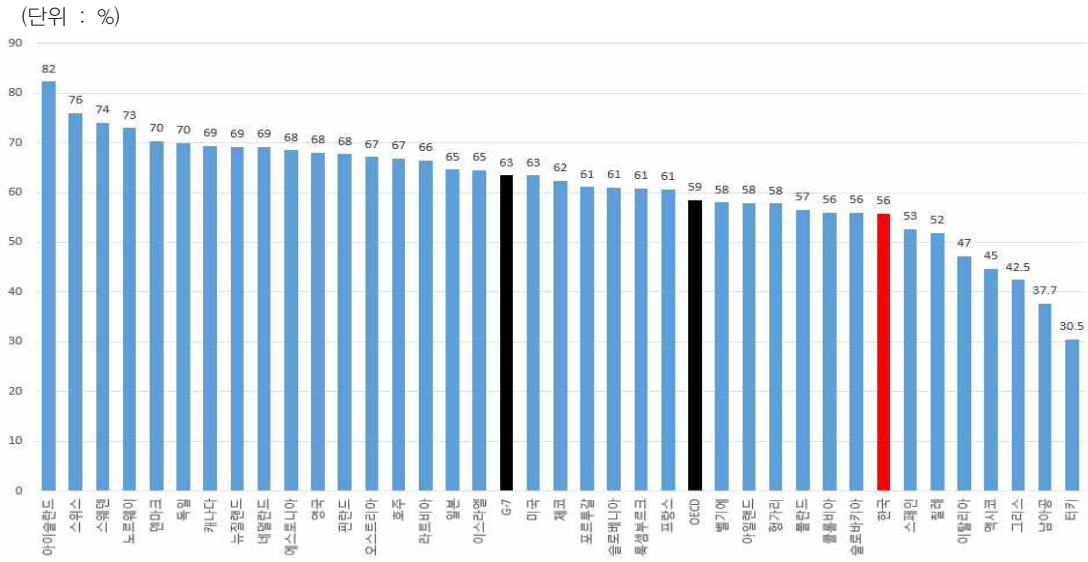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기준으로, 아래 <그림 7>과 같이 OECD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비율로 조사 국가 들 중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비교국가 대



2017 전망 보고서

비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최근의 추세가 아니라 지속되어 온 모습이다. 이렇게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제고 되지 않은 이유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성별·연령대 별 고용 및 경제활동참가율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알파벳 'M'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주로 발생하는 30대에 여성의 취업률 20대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즉,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 머물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7. 2015년 여성 고용률 국제 비교



출처 : OECD 홈페이지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저성장 시대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현 시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여성들의 고용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전부터 육아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일 시행해 왔다. 즉,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와 함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려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시장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필요도나 정책의 혜택을 받았을 때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제도가 미 활용 되는 경우의 68.8%가 직장 내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소득이 낮고, 소규모 기업이며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직장에서 더욱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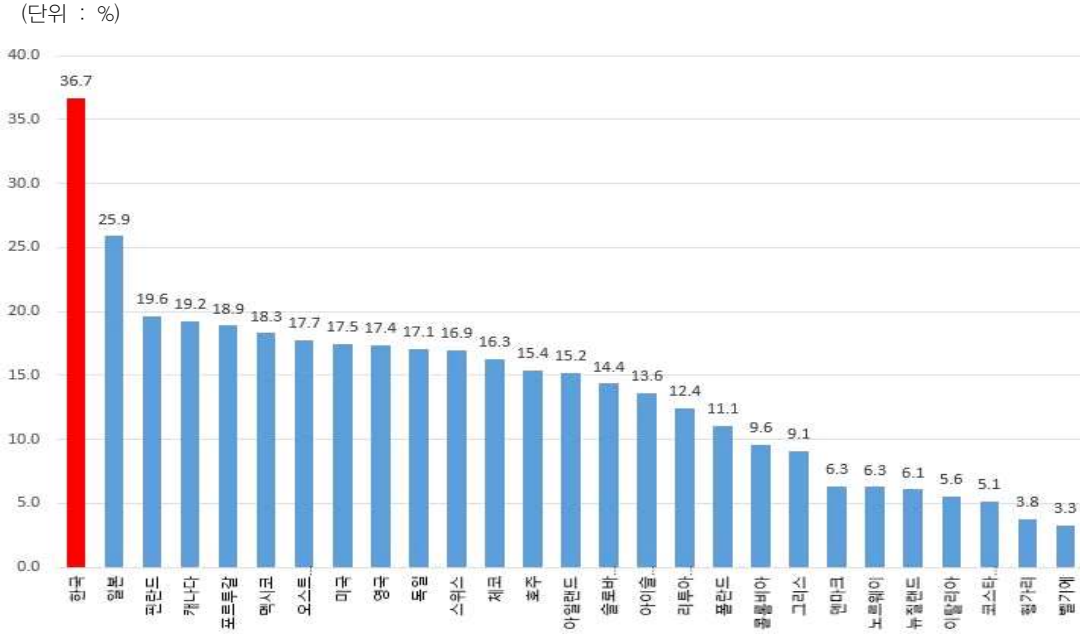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 시각이 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임



2017 전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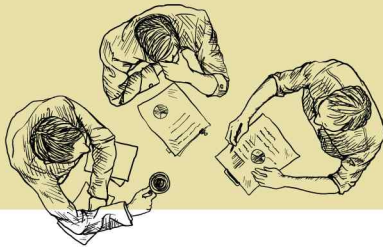
기 여성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이른바 ‘출산지도’를 통해서 여전히 여성을 출산과 육아의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만연한 것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중요한 사안이고, 경력단절이 주로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사항이다. 출산과 육아에 관련한 지원을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봐야하는 인식적 제고가 필요하다.

그림 8. 2014년 성별 임금격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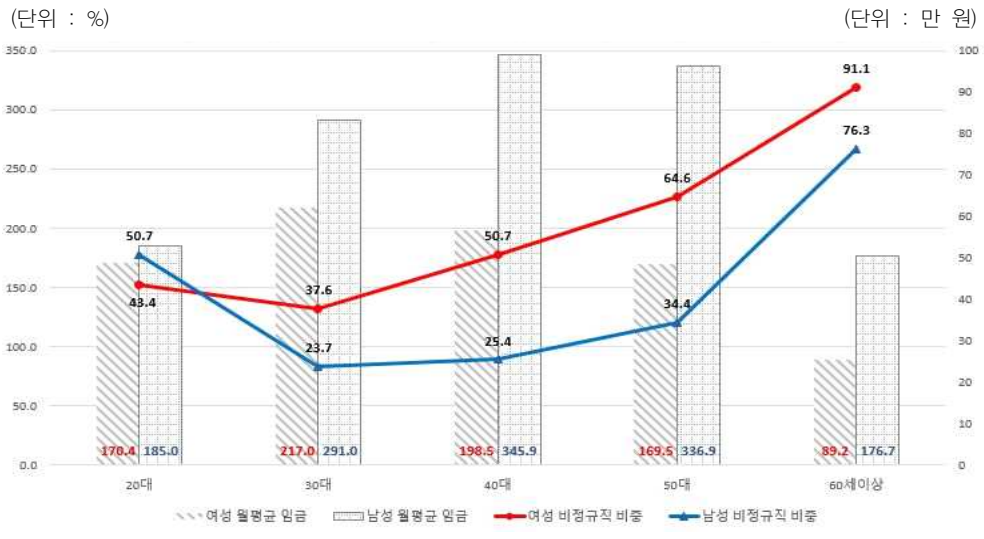
출처 : OECD 홈페이지

<그림 8>은 2014년 조사한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이다. 한국은 10년간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임금격차가 큰 나라였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는 앞서 언급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에서 야기된 것이다. 이 격차는 2위 국가인 일본과도 10%p 이상 차이가 나고, 평균적으로 1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7 전망 보고서

그림 9.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활용 추계
 참고 : 좌측 축 - 비정규직 비중, 우측 축 - 임금

<그림 9>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연령별로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곡선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동시에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추세로 증가하는데, 이는 노동시장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대우가 차별적이며 임금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문제와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은 빈곤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고자 해도 남아 있는 일자리가 비정규·저임금 일자리라는 면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양질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는 동시에 가정 내 출산과 육아의 책임자의 역할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공감대가 얇고, 경력단절 후 주어지는 일자리도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사회 구조 내에서 겪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쉬운 해고에 대비해야 할 때

2015년부터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노동개혁’중 가장 집중을 받았던 제도 중 하나는 성과연봉제였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9월말부터 금융노조,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 공사, 그리고 화물연대까지



2017 전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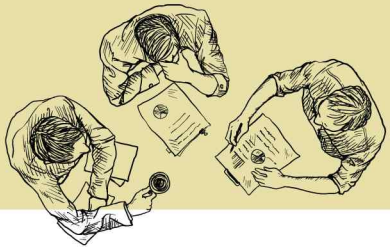
saesayon.org

과업에 들어가며 ‘쉬운 해고’를 막고자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장기 과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도 이른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기조로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며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다.

하지만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그 열기가 가려졌고, 금융계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위기에 놓여있다. 즉, 이러한 시국에도 성과연봉제 정책 실행의 추진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이다. 노조 차원에서 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초에 법원은 기업은행 노조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물론 본안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법원에서조차 해당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의 변경 사항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19개의 공공부서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하게 되면 정규직도 불안정한 일자리로 만들어 노동시장의 불안감은 지금보다도 훨씬 증폭 될 것이다.

또한 2016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를 보았을 때, 이미 시간제 같은 인력수급 조절이 쉬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는 비정규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칙을 4년으로 늘여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제안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금융계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 때, 정규직으로 입직한 종사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분리된 정규직으로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의 1/3이 해당 직군의 노동자였다. 이들은 임금상승률과 승진에 제한이 있으며, 이미 성과연봉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직업의 특성상 성과에 민감하다. 그런데 이 제도까지 시행되면 직장의 환경이 과하게 경쟁적이며, 그에 대한 보상보다는 저성과자로 분리 되어 희망퇴직 시의 퇴직금 혜택도 없이 해고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의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과 여성, 그리고 고령층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채우며 사회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의 문제와 사회나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채우는 양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 양적 지표에 집착하지 않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창출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쉬운 해고에 대비하며 소극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거나 앞선 예시처럼 탈출한다면 노동자와 기업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2017 새사연 전망 보고서 목록

분야	날짜	제목	작성자
노동	1월 9일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송민정
복지	1월 16일	추후 공개	최정은
국내외 정세	1월 23일	추후 공개	박세길
세계경제	2월 3일	추후 공개	송종운
마을	2월 6일	추후 공개	강세진
부동산	2월 10일	추후 공개	권순형
보건의료	2월 13일	추후 공개	고병수
소득불평등	2월 17일	추후 공개	김창근
종합	2월 20일	추후 공개	송종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 주세요.